

전북도, 고창태양광발전소 신청 불허" id="MetaOgTitle



'삼양사 휴 염전 태양광발전소 반대 고창군민준비위원회(위원장 이상복 · 이하 준비위원회)'는 2일 고창군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도의 태양광발전시설 불허 결정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2016.03.02 © News1 박제철 기자

전북도가 자연경관을 해치며 무분별하게 난립되고 있는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제재를 가했다.

도는 최근 태양광 전기발전 시설업체인 동일TNS가 고창군 심원면 만돌리 일대에 추진하려는 '고창태양광발전소' 신청을 불허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삼양사 휴 염전 태양광발전소 반대 고창군민준비위원회'(위원장 이상복)는 이날 고창군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도의 태양광발전시설 불허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복 위원장은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문화유산과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돼 있는 고창군에 축구장 200배에 달하는 58MW급 초대형 태양광 발전소 건립은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다"며 "전북도의 태양광 발전소 불허 결정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고창군 심원면 휴 염전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 완충지역 연안습지로 염생습지의 보고로, 환경피해는 물론 경제적 손실, 청정 고창군의 이미지 훼손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들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동일이라는 사업체는 경험과 전문기술, 자본력 추후 사업추진 계획 등이 의심되는 업체로 부적합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군민의 대변자로 선출된 지역 정치인들도 이번 사태를 방임과 방관으로 묵인하지 말고 삼양사 휴염전을 포함한 염 습지 50만평을 자연환경보호법 등 관련법에 따라 국가지정 생태경관지역, 생태경관지역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생태 자연환경보전에 앞장서 줄 것"을 촉구했다.

준비위원회는 앞으로 삼양사 휴 염전부지 보전 및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연안습지 생태계를 보호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고창태양광발전소는 태양광 발전시설업체인 동일TNS(17.9MW)를 비롯해 동일EPS(16.5MW), 동일 IES(14.5MW), 동일 SDS(9MW) 등 4개 회사가 총 965억원을 투입해 20개 발전소(총 58MW)를 세운다는 계획으로 지난해 10월 전북도에 사업신청서를 분할 제출한 바 있다.

한편 태양광발전사업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3000kW 초과인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3000kW 이하인 전라북도지사, 100kW 이하인 고창군에서 각각 허가 처리하고 있다. 사업허가 후 전기설비공사 계획 신고 시 개별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박제철 기자(jcpark@)

“고창태양광발전소 불허처분 환영”

고창군민 준비위원회 밝혀

삼양사 휴 염전 태양광발전소 반대 고창군민 준비위원회(이하 반대준비위)는 (가칭)고창태양광발전소 전라북도 전기발전사업허가 불허 처분에 대해 적극 환영했다.

반대준비위는 2일 군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의 활동사항을 브리핑하고 지난달 29일 전북도의 불허 결정을 전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대위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소가 건립될 위치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완충지대로,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시기에 초대형 발전소가 들어서는 것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역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선 이곳의 생태환경을 보존하면서 지역전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반대준비위는 “휴 염전부지를 국가지정 생태경관지역, 도 지정 생태경관지역, 습지보호지역 등으로 지정해 생태자연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앞장서 줄 것”을 촉구했다. 고창=남궁경중 기자